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자본재산업 육성 대책

통상산업부

— 목 차 —

1. 한국경제 세계화의 당면과제
2. 자본재산업 육성 필요성
3. 자본재산업의 현주소
4. 자본재산업 육성 대책
 - 1) 수요기반 확대
 - 2) 생산 지원 확대
 - 3) 품질보증업무 강화
 - 4) 기술·인력 및 정보 지원
 - 5) 외국인 투자의 적극 유치
5. 21세기 자본재산업의 비전과 각오

1. 한국경제 세계화의 당면과제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늘어나면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70년대초 경공업에서 중화학 위주로 정책을 전환하였으나 완성품 위주의 조립생산에 치중하여 기계류·부품산업은 경쟁력이 미약한 형편이다.

'93년 자본재의 수입의존도가 26.6%였으며 '90년 투자의 수입 유발효과가 28.4%로 일본의 9.5%에 비해 자본재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자본재 수입이 늘어나 국제수지 적자폭은 확대되어 '94년 전체 수출입차가 63억불에서 '95년 1/4분기에 43억불에 이르고 있다. 또한 자본재 수출입차(반도체 제외시)는 '94년 31억불에서 '95년

	'94	95. 1~3
· 전체수출입차(억불)	△63	△43
· 자본재수출입차(억불)	△31	△15
(반도체 제외시)	(△95)	(△35)

	'94	95. 1~3
· 대일자본재수출입차(억불)	△138	△37
· 대일수출입차(억불)	△119	△36

1/4분기에 15억불에 이르고 있다. 이에 자본재 수입은 대일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산업이 임금구조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94	95. 1~3
· 산업생산증가율(%)	11.1	14.1
(경공업)	(3.1)	(3.8)
(중화학)	(13.9)	(17.8)

최근 전반적으로 경기는 호황국면이지만 경공업과 중화학 공업간의 격차는 지속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임금상승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경공업은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93년 부가가치대비 인건비 비중이 경공업이 59.3%, 중화학이 49.6%를 차지하고 있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고임금 현상은 지속될 것인 만

편집자 주) 본고는 지난 5월 10일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신경제 추진 위원, 자본재 산업 관련인사 등 1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5회 신경제 추진회의를 개최하여 재정경제원 장관과 통상산업부 장관이 보고한 내용이다.

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가 자본재산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투자증가시 수입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자본재 산업 육성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2. 자본재산업 육성 필요성

자본재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으나 일단 경쟁력을 갖게되면 개도국의 추격이 곤란한 산업이다.

자본재산업은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계류·부품·소재를 만드는 산업으로 전체산업의 경쟁력을 궁극적으로 좌우하게 되는데 가격보다는 기술·품질이 중요시 되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다.

이에 기술습득이 어려워 선진국들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나 수입규제가 없는 분야로 일단 경쟁력을 갖게 되면 수출증대는 물론 개도국의 추격이 곤란하다.

최근 자본재산업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도래했다.

엔고로 일본 자본재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 기업들은 해외이전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우리 기술수준 및 주변산업 여건이 동남아 국가보다 우위에 있어 일본기술 흡수에 유리하다.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산업화 추진으로 인한 자본재 수요증대가 예상된다.

따라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이번 기회에 자본재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토록 할 것이다.

3. 자본재산업의 현주소

자본재산업의 비중은 증대되고 있으나 핵심분야의 경쟁력은 취약한 상태이다.

자본재산업의 업체수는 2만 4,000개로 86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중소기업 비중은 업체수 기준으로 98.8%, 종업원수 기준으로는 64.1%이다.

그동안 자본재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국민경제 내에서 자본재산업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자본재산업의 GNP 비중이 5.4%(80)에서 13.9%(94)로 증대되었으며 자본재의 총수출 비중이 22.9%(80)에서 49.8%(94)로 증대되었다.

그러나 반도체 등 일부품목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계류·핵심부품·소재산업은 경쟁력이 미흡하다.

특히 설계기술·제어계측 기술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기계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이며, 전기·전자는 대일수입역조가 심

한 편이다.

4. 자본재산업 육성 대책

자본재산업 육성 추진 전략으로는 국산화 차원을 넘어 자본재산업을 21세기 우리나라의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나아갈 것이다.

전략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세계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자동차, 전자 등 수요대기업이 있는 경우, 수요대기업이 주도적으로 기계 및 부품 개발을 추진하도록 유도해 나아갈 것이다.

이에 대기업이 중소 기계·부품 산업을 지원하는 데 대하여 정부는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일반기계와 같이 특정 수요대기업이 없는 경우, 통상산업부가 수요·생산업체의 참여하여 개발계획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시제품 개발에서 판로 확보까지 일관성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자금지원과 함께 기술, 인력, 정보 등 기반조성을 확대할 것이며 일반기계, 자동차, 전자 부문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을 해 나아갈 것이다.

아울러 빠른 기술습득을 위해 일본으로부터의 투자유치 노력을

	'94		'95, 1~3	
	전체	대일	전체	대일
· 일반기계 무역수지(억불)	△135	△75	△41	△21
· 전기·전자 무역수지(억불)	128	△42	31	△11
· 자동차부품 무역수지(억불)	△7	△8	△2	△2
· 소재 무역수지(억불)	△17	△13	△3	△3

강화해 나아갈 것이며 자본재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1) 수요기반 확대

가. 현황과 문제점

국산기계 구입의 금융조건이 외산에 비해 불리한 실정이다. 외산기계구입시 금리(외화대출금리)가 국제금리 7%수준이며 국산기계구입자금 금리는 국내 실세금리 13-15%까지 적용된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

나. 대책 방안

'96년까지 국내의 금융조건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95년중 국제금리 수준의 외화표시국산기계구입 자금규모를 1,2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다.

'96년중 외화대출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외화대출 대상품목에 외산뿐만 아니라 국산기계 구입 및 리스이용도 허용하여 저금리의 해외자금을 활용하여 국산기계 구입자금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외산과 국산의 금리차이 해소로 국산기계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유자대상은 통산부장관이 재경원장관과 협의·고시하는 품목으로 하여 우선 파급효과가 큰 핵심품목 중심으로 고시하고 연차적으로 대상품목을 '96년 30%, '97년 50%로 확대해 나아갈 것이다.

금리인하 효과로는 지정고시 품목은 5-7%p, 국산기계류 전체는 '96-'97년중 1.5-2.5%p로 예

상된다.

또한 기계류전문 할부금융회사를 기계류 생산기업들의 콘소시엄형태로 설립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기계류 수출 지원 확대를 위해 연불수출자금을 '95년 28,000억원에서 '96년 35,500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며 기계류 수출에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우선 지원할 것이다.

2) 생산 지원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개발자금 지원규모가 불충분하여 핵심기술 개발에 한계가 있으며 다수품목을 소액지원하여 지원효과가 분산(평균 2억원 지원)되어 있다. 또한 표준화가 미흡하여 수요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나. 대책 방안

공업발전기금 중 시제품개발자금 지원을 '95년 1,200억원에서 '96년 2,000억원으로 확대해 나아갈 것이다.

또한 품목당 지원한도도 5억원에서 20억원(필요시 특별한도 인정)으로 늘릴 계획이며 전략품목에 대해 상환기간(2년거치 3년상환) 연장을 검토할 것이다.

수요기업이 중소기업체와 공동개발하는 품목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다수 품목에 대한 소액지원방식을 전략 품목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다.

또한 신기술금융회사가 대출심사시 기술성의 배점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신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

다.

자본재 기업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한도를 현행 매출금액의 3%에서 5%로 상향조정할 것이다.

또한, 표준화기획단을 공업진흥청(단장:차장)에 설치하여 표준화를 위한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아갈 것이다.

3) 품질보증업무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우수제품을 개발해도 수요자가 품질을 믿지않아 구매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대책 방안

품질검사업무를 지원하는 「품질인증센터」를 공업기술원 또는 연구기관에 설치하고 그 기능으로 인증업무의 청구역할, 품질자체평가 및 인증, 국내외 적정 인증기관에 의뢰, 국내외 자본재의 품질비교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외국기관의 품질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외시장 개척 기금에서 일부지원하고 품질평가에 합격한 품목에 대하여 「우수품질마크」를 부여할 것이다.

우수품질마크 제품의 생산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다.

또한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간이심사 지원을 강화하여 창업 1년미만은 3억원까지(신규), 3년미만은 3억원에서 6억원까지로 강화해 나아갈 것이다.

아울러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할 경우에는 창업지원기금에서 50%

까지 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우수품질마크」 품목에 대해서는 중대한 하자 발생시 제품 가격 전액을 배상해주고 「하자보증제도」를 실시하여 기계공제조합의 기계류하자보증기금에 정부와 민간이 50%씩 출연하여 기금규모를 확대해 나아가기로 했다.

4) 기술·인력 및 정보 지원

가. 현황 및 문제점

완성체를 중심으로한 조립가공 기술과 반도체 소재 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어느 정도 접근하였으나, 전자·기계·설비·부품·소재 기술은 선진국에 크게 뒤지며, 핵심부품과 설계기술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산업 부문별 기술수준

산업부문	기술분야	기술수준 (선진국=100)
전자	컴퓨터	30-40
	제어계측	30
	전자제품	60
	반도체	60-70
기계·설비	메카트로닉스	40-50
	자동화	70
	환경설비	40-50
소재	금속소재	60
	반도체소재	90

공고, 전문대, 공대 등 기술 및 기능인력 공급이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교육기관의 실습장비가 불충분하고 노후한 실정이다.

또한, 정보관리체제가 미흡하여 정보수집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왔다.

나. 대책 방안

이의 대책으로 공고, 전문대, 공과대학 정원을 '94년 14%에서 2000년 22%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갈 것이며 기능대학 등 2년 다기능기술과정에 수요가 많은 단기직업훈련과정(주·단조, 금형, 열처리, 용접 등)의 연수대상 인원을 확대하여 전문대 수료 학력을 인정해 줄 계획이다.

기술수준이 낮은 설계부문의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해 특정연구개발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핵심 엔지니어링 기술개발을 강화해 나아가갈 것이며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설계인력 양성기관 및 과정을 확대해 나아가갈 계획이다.

또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교육 및 직업훈련기관의 노후 교육기자재를 연차적으로 최신 국산으로 대체해 나아가갈 것이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국내외 퇴역기술자로 「기술지도단」을 구성하여 핵심에 로기술에 대한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아가갈 것이다.

아울러 외국의 유능한 기술자 유치 방안도 검토해 나아가갈 것이다.(예시 : 영주권 부여 등)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은 중소기업 종업원수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지원을 강화해 나아가갈 것이며 자본재산업의 중소기업에서 장기근무하는 현장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근무연한에 따라 소득세 경감을 추진해 나아가갈 것이다.

또한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제도」('94년 : 35,500명)를 확대할 것이며 「자본재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자본재산업과 관련한 창업, 기술, 경영, 정보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해 나아가갈 것이다.

5) 외국인투자의 적극 유치

우선 지자체의 외국인기업 유치에 대해 중앙정부지원을 확대키 위해 미분양공단을 외국인기업에게 공단조성원가보다 낮게 분양할 경우 그 차액의 50%(신규조성 3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임차의 경우 중앙정부가 용지매입가의 50%(신규조성 30%)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또한 광주 평동 외국인 전용공단의 입주요건을 분양가를 인근 공단 수준(평당 28.6만원)으로 인하조정하고 임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5년) 임대료를 대폭 경감하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아가갈 것이다.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예외를 인정, 외국인전용공단의 입주업체에 대하여 일본의 기자재 및 부품수입을 허용하게 될 것이다.

우수외국인력의 체류 상한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대일투자유치사절단 활동을 강화해 나아가갈 것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부품, 전자 등 업종별 대일 투자유치단을 파견하고 일본의 「대한투자 조사단」을 유치하는 등 '95년 11월 동경에서 「한국부품종합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5. 21세기 자본재산업의 비전과 각오

이번에 수립한 자본재산업 육성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전략핵심품목의 개발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경우 대일 수입이 수출의 2배 수준('94년)에서 2000년에는 1.5

배로 낮아지고, 10년후인 2005년 경에는 대일 무역수지가 균형수준에 근접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자본재의 수출규모가 '94년도 478억 달러(총수출의 49.8%)에서 2005년에는 1,500억 달러를 상회함으로써 전체수출에서 60%수준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경제는 후발개도국에 대해 뚜렷한 경쟁우위

를 확보하면서 전후에 자본재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한 최초의 나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며 명실공히 우리경제의 세계화가 이룩되어 우리나라는 세계의 중심국가의 하나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 근로자와 경영자, 기업과 정부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을 다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산업정보전산망이란 ?

1. 산업정보전산망 사업의 추진 배경

1) 다가오는 21세기는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전세계적 무한 경쟁 시대로 접어들어 국가적 차원의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핵심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생산/판매의 자동화, 필요정보 전달의 네트워크화 등 정보 시스템화가 중요한 선결과제로 국가적 차원의 산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2) 그러나, 국내의 현실은 개별기업 및 단체별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양적/질적인 수준이 취약하여 기업체간, 산업간, 정부단체 등의 필요정보 유

통 및 이용이 미흡하여 기업활동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이러한 이유로 통상산업부 주관으로 산업정보전산망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법률(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추진)을 개정하였으며, 이 법률을 근거로 하여 국가 기간 전산망인 산업정보 전산망 사업을 추진하게 되다.

2. 산업정보전산망의 정의

산업정보전산망이란 우리나라 산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자료가 컴퓨터와 통신설비로 상호연결되어 필요로 하는 자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제공/유통되고 활용되

도록 하는 산업부문의 정보 유통망을 말한다.

3. 산업정보전산망 추진목적

1) 세계화, 개방화에 대응하여 정보 시스템화를 통한 우리나라 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2) 각 산업 및 산업간의 정보 공유, 정보 유통체제의 확립을 통해 산업 부문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강화할 수 있다.

3) 행정, 무역, 물류, 통관 등 공공부문의 타 전산망과 연계하여 정보 공유 및 종합적인 산업 정보 전산망을 구축할 수 있다.